

## 청년 (등록금, 일자리, 주거) 공약 평가

### 1. 평가단 구성

나병현(서울대 강사), 고경일(백석대 경상학부), 노상헌(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서순탁(서울시립대 도시행정학과)

남은경(경실련 도시개혁센터 팀장), 권오인(경실련 경제정책 팀장), 김성달(경실련 부동산국책 팀장)

### 2. 청년 공약 비교표

구분	문재인	홍준표	안철수	유승민	심상정
등록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획기적 인하</li> <li>- 대학등록금 부담 절반(반값 등록금 재정 연평균 1.2조원)</li> <li>- 지역국립대 육성, 교육비지원 인상</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반상환학자금 대출 저금리 전환</li> <li>- 취업후 상환학자금 대출제도 무이자 전환</li> <li>- 대입성적우수자 입학등록금 지원</li> <li>- 대학졸업유예비 폐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학 입학금 폐지 및 등록금 인상 상한제 개선</li> <li>- 학자금 대출금리 1% 이하, 상환기간 자유롭게 설정, 소득기준 폐지</li> <li>- 소득분위별 국가장학금제도 개선, 장학금 통합관리시스템 구축</li> <li>- 국가책임장학금제도 시행(지원범위 확대, 재학중 모든 대학생에 지급, 저소득층 무상지원 및 무이자 상환)</li> <li>- 등록금심의위원회 권한 강화</li> </ul>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공립대 등록금제로, 사립대 액수상한 표준등록금제로 등록금 반값, 입학금 폐지. 고등교육제정교부금법 제정.</li> <li>- 학자금대출금리 1%로 인하, 대학생도 취업후 상환, 졸업 25년 후 상환면책</li> <li>- 개인회생절차 상변제기간 3년으로 단축, 35세미만 변제기간은 최대 1년으로 단축, 파산시 면책대상 포함</li> </ul>
청년일자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20년까지 향후 3년간 한시적으로 청년고용의무 할당제 적용</li> <li>- 공공부문 현행 3% → 5%로 확대하고</li> <li>- 민간 대기업 규모에 따른 차등 적용 추진 이행 (300인 이상 3%, 500인 이상 4%, 1,000인 이상 5%)</li> <li>- 의무 고용제 성실 이행한 기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외시장 개척을 통한 일자리 창출</li> <li>▪ 인도 등 신시장 개척 강화</li> <li>- 인도를 포함한 해외신흥시장에 전략적 상품전시회 개최</li> <li>- 지역별 맞춤형 시장 진출 지원</li> <li>▪ 해외 건설을 통한 처년 일자리 창출 지원</li> <li>- 해외 인프라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5년간 한시적인 청년 고용 보장 ( Youth Guarantee) 집중 추진</li> <li>- 중소기업 초임 (2500만원)이 대기업 초임연봉 (4000만원)의 80% 수준까지 이르도록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 1인당 월 50만원씩 2년간 지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대한 고용보험 : 실업수당 인상 및 지급기간 연장</li> <li>- 청년실업부조 및 특별실업부조 제도 도입</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습기간 중 최저임금의 90%만 적용하도록 한 「최저임금법」 개정으로 수습기간 노동자에게도 최저임금 100% 보장하고 인턴제 폐지</li> <li>▪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이 매년 의무적으로 고용해야하는 청년미취업자 비중을 기존 정원 대비</li> </ul>

<p>기업에 인센티브 부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의무 고용제 불이행 기업에 고용분담금 부과 (청년고용지원기금) 신설 추진</li> </ul> <p>▪청년구직촉진수당 도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용보험에 미가입한 취업준비생(청년 NEET 포함, 18~34세 적용) 대상, 중앙·지방정부의 공공 고용서비스 참여로 자발적 구직활동을 증명 시 지급</li> </ul> <p>▪근로감독관을 확대하고 최저임금 전담감독관 설치해 청년 체불을 획기적으로 줄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년·알바체당금제 도입해 '체불 사실인정'만으로 먼저 임금을 지급하고, 국가가 구상권 행사</li> <li>- 「알바존중법」 도입해 “30분 배달제”와 같은 부당한 업무지시 제한 근거 마련, 「근기법」상 금지되는 폭행(제8조)에 지속적 폭언 등 정신·정서적 학대 행위 포함 등</li> <li>- 3개월 계속 근로를 제공하는 청년알바에게 실업급여 확대 적용(초단시간 포함)하고, 퇴직(금)급여도 지급 받을 수 있도록 함</li> </ul> <p>※ 이행기간</p> <p>▪청년고용할당제·구직촉진수당·알바존중법 :</p>	<p>시개발 지원기구 설립</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외 진출 중견·중소 건설기업에서 신규채용되어 해외에 파견된 청년에 대한 훈련비 추가지원 대폭 확대</li> <li>- 해외건설 및 플랜트 현장연수에 청년·저소득층 우선선발</li> <li>- 해외플랜트 건설교육 등 해외건설 관련 교육 프로그램 확대·강화 등을 통한 글로벌 청년리더 양성</li> </ul> <p>▪연해주 산업공단 개발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유라시아 교통 물류망 구축으로 대륙진출의 교두보 마련</p> <p>▪청년실업자를 '고용부 취업성공패키지' 참여·교육(청년 20만명/년)시켜, 매년 10만명을 혁신형 중소기업에 취업</p> <p>▪취업자 목돈 마련 지원을 위해 '내일채움공제'를 대폭 확대하여 4년 뒤 3천만원 목돈마련</p> <p>▪구축된 청년 기술창업 플랫폼(TIPS, 연구소 기업 등)을 확대하고, 투자 및 R&amp;D·해외시장 진출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여 대학발 기술창업을 유도</p> <p>▪규제개혁과 R&amp;D.</p>	<p>▪미취업 청년 훈련수당 지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취업 청년이 취업 역량을 위한 학습(자격증 취득, 직업훈련, 체험프로그램 등)에 참여할 경우 1인당 월 30만원씩 6개월간 지원</li> </ul> <p>※ 실천계획</p> <p>▪기존 일자리 예산에서 조정해 재원 마련</p> <p>▪고용보험법 등 관련 법률 개정</p>	<p>3%에서 5%로 상황조정(1만 5천개 신규 일자리 창출)</p> <p>▪300명 이상의 민간기업 역시 5% 이상 청년의무고용 할당제 적용(23 만개의 신규 청년일자리 창출)</p> <p>고위 공직자 자녀 취업 현황 신고 의무화. 청탁에 의한 부당 채용을 한 기업 처벌 강화로 공기기업 등 취업 특혜 근절</p> <p>▪사립학교 교원임용 채용의 교육청 위탁 의무화. 사학 채용비리 징벌 적 조치 강화해 친인척 취업 특혜 근절</p> <p>▪기회균형채용제 도입으로 청년고용할당에서 여성 30%, 고졸이하 학력 10%, 전문대와 지방대 30% 할당</p> <p>▪수저색깔 없는 표준이력서 도입, 차별 없는 채용과정의 법제화. 나이 성별외 모출신지역학벌가족관계 등의 이력서 기재 금지</p> <p>▪실업급여제도 개선. 자발적 실업자에게도 ▪실업급여를 제공하고 실업 급여 수급 요건 완화, 실업급여 수급 기간 연장</p> <p>▪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주 15시간 미만</p>
--	---	--	--

<p>2017년 내 법률 개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청년 주거비 : 2017년 관련 법령 정비 및 2018년부터 예산 확대 지원 추진</li> </ul> <p>※ 재원조달방안 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청년고용할당제 : 법 개정 사안으로 미소요</li> <li>▪청년구직촉진수당 : 연평균 5,400억원</li> <li>▪청년주거대책 등 공공임대 확대 공급: 연평균 3.0조원</li> </ul>	<p>확대 등을 통해 서비스시장 창출 및 수요증가로 약 32만개의 추가 일자리 창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분야별 추가 일자리 규모 : 제약·바이오 산업 등 보건 의료 12만개, 관광 7만개, 콘텐츠 6만개, 교육 3만개, S/W2만개, 물류·금융 2만개</li> <li>- 제조업·서비스업 간 융·복합 추진</li> <li>- 서비스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R&amp;D·투자 확대</li> <li>- 네거티브 방식의 규제개혁 추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공공기관 청년문화법인 설립 및 청년문화인 3,000명 채용</li> </ul> <p>◎ 청년 문화인 육성 및 일자리 창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문화분야 창업지원용 ‘문화적 기업’ 인증제도 도입</li> <li>▪VR콘텐츠 성공사례 발굴 및 확산</li> </ul> <p>◎ 한국형 실업부조제 도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취업성공패키지를 제2의 고용안전망으로 제도화</li> <li>- 근로능력 있는 저소득 취약계층·청년대상(약 56만명 추정)</li> <li>- 적극적인 노동시장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구직수당 지급</li> <li>- 취업지원 프로그램에 집중할 수 있도록 2단계</li> </ul>			<p>초단시간 노동자의 고용보험 가입 허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청년실업부조 도입. 15세~35세 미만 청년 중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실업급여 지급이 종료된 경우, 고용보험 수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청년에 대한 청년 실업부조 도입. 소득 7분위 이하 가구의 청년에게 1년 범위에서 최저임금의 50%인 월 68만원 지급</li> </ul>
--	---	--	--	--

		<p>훈련참여수당의 지급 수준 및 기간을 상향조정</p> <p>◎ 중소기업 취업 청년소득세 감면 확대</p> <p>▪중소기업 취업 청년의 소득세 감면율 현행 70% -&gt; 100% 상향조정</p> <p>- 총급여 2천만원 ~ 3천만원 인 근로소득자의 근로소득세 평균 결정세액은 18.9만원, 감면율 인상 시 추가 감면세액은 최대 5.7만원</p> <p>◎ 청년임금체불 근절</p> <p>▪임금체불 사업장 공개조건 완화 및 채용정보 사이트 내 임금체불 사업장 정보 공개</p> <p>▪중소기업과 영세 사업장 대상 근로감독 강화</p> <p>▪상습적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한 체불임금 해당부가금 청구제도 도입</p> <p>▪상습·악의적 임금체불 사업주 근로권익 의무교육 실시</p> <p>◎ 청년 전담부서 신설</p> <p>▪청년정책의 효율성 및 정책수요자의 체감도 제고를 위해 청년문제 전담부서 신설(여성가족부 -&gt; 여성가족청년부)</p> <p>- 청년발전과 청</p>			
--	--	---	--	--	--

		<p>년문제 전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년정책에 대한 통합행정시스템 구축 및 운영</li> <li>- 청년정책 집행의 체계적·효율적 추진</li> </ul> <p>◎ 글로벌 청년인재 양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외진출 경험을 통한 미래 지도자 육성</li> <li>- WFK해외봉사단 규모 현행 5,760명 → 4만명으로 확대</li> <li>- 워킹홀리데이 규모 현행 21개국 3.7만명 → 4만명으로 확대</li> <li>▪ 청년해외취업 및 초기 정착 지원 확대</li> <li>- 해외 취업 원스톱 취업서비스 현행 1.8만명 → 2만명 수준으로 확대</li> <li>- 초기 정착지원 현행 2,500명 → 1만명으로 확대</li> </ul> <p>◎ 중소기업 청년 초임 200만원 시대 실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저임금 150% 이상 초임보장을 위한 고용촉진세액공제 또는 고용장려보조금제도 도입(청년고용촉진특별법 개정)</li> <li>▪ 청년들의 중소기업 정규직 채용 후 2년간 최저임금의 150%수준을 미달한 경우 미달액에 대해 정부와 기업이 각각 50%부담</li> </ul>			
--	--	---	--	--	--

청년주거	<p>[청년층 맞춤형 주택 30만실 공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대도시 역세권내 시세이하 청년주택 20만실 확보</li> <li>·월세 30만원 이하 셰어하우스형 청년임대주택 5만실 공급</li> <li>·대학 기숙사 수용인원 5만명 확대</li> </ul> <p>[신혼부부 집문제 해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신규공공임대주택 30%(연간 4만호) 신혼부부 우선 배정</li> <li>·신혼부부 '생애최초 전월세 보증금 융자' 확대</li> <li>·'신혼부부 주거안정 지원금' 지원 (결혼후 2년간 한시적으로 월 10만원 지원)</li> <li>·출산시 공공임대 우선배정, 다자녀 비례 우선분양제 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청년 및 신혼부부를 위한 주거지원 100만호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공임대 30만호) 2030세대에게 공공임대주택 입주우선 할당, 연간 6만호 규모로 시세보다 30% 저렴하게 공급</li> <li>- (구입,전세자금 55만호) 시중금리보다 낮은 저리의 주택임대자금 및 전세자금 지원확대(연간 구입 2.5만호, 전세 8.5만호)</li> <li>- (주택수당 10만가구) 공공임대주택 입주가 어려운 2030세대 임대료 보조</li> <li>- (공공분양 5만호) 2030세대 내집마련을 위한 '10년 만기 주택 자산만들기' 및 시세보다 10% 저렴한 분양주택 공급</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청년희망임대주택 매년 5만호 공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숙사형, 사원임대주택, 대도시형·중소도시형 공급</li> <li>- 건설임대, 매입임대, 공공원룸텔, 셰어하우스, 사회임대주택 확대</li> </ul> </li> <li>·청년빈곤층에 청년희망임대주택 우선 공급</li> <li>·신혼부부의 공공임대주택 입주조건 완화</li> <li>·청년주거빈곤가구에 임대보증금 융자 지원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증금 1600만원 한도, 5만명에 대출이자 지원</li> </ul> </li> <li>·청년빈곤층에 청년희망임대주택 우선 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저소득 청년 1인가구, 부모부양 청년가구, 청년부부가구 입주조건 개선</li> </ul> </li> <li>·청년주거빈곤층에 주거비 지원 기반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공임대주택의 소득대비 주거비 부담 기준 마련</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청년층 1~2인가구 소형임대주택 22년까지 15만호 공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존 빈집 및 노후주택 재건축 후 대형주택을 소형주택으로 분할, 토지임대부 개발 등을 통해 셰어하우스, 임대주택(주변 시세의 80%) 등 청년공간으로 활용</li> </ul> </li> <li>·소득 등에 있어 일정 기준 이하의 1인 청년가구를 주거취약계층에 포함하는 법적 근거 마련<sup>1)</su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애인 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li> </ul> </li> <li>·일정 소액보증금의 무이자 융자 및 대출 보증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낮은 소득 대비 높은 주거비용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소액임대보증금의 무이자 융자 및 대출보증을 통해 물리적 주거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지원</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인 가구 맞춤형 소형임대주택 공급 확대</li> <li>·사회주택 공급 활성화</li> <li>·서울시형 장기안심주택, 원룸형 임대주택 공급을 국가사업으로 확대하고 청년에게 30% 할당</li> <li>·1인가구 주거금융 지원</li> <li>·기숙사에 들어가지 못한 학생 대상 월20만원의 대학생 주거수당 지급</li> <li>·기숙사 수용률 30% 이상 의무화로 기숙사 확충</li> </ul>
------	---	--	---	---	---

주1) 공약집 내용이나 평가당시에는 미발표로 평가에는 반영되지 못함

#### 4. 평가지표

평가 지표	세부 평가 기준
공약의 가치성 (개혁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속가능한 발전을 지향하는 비전을 제시하고 있는가?</li> <li>-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가?</li> <li>- 국민의 참여와 권익을 강화하는 정책인가?</li> </ul>
	정책공약이 나라의 바람직한 미래상을 담고 있는가?
공약의 구체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약이 구체적이고 완결적인가, 적절한 범위인가?</li> <li>- 임기동안의 연도별 추진 계획이 잘 제시되었는가?</li> <li>- 제시한 공약의 목표는 적절하게 제시되어있는가?</li> <li>- 공약에 따른 예산 배분 계획 및 재원 확보 방법이 적절한가?</li> </ul>
	정책공약이 육하원칙에 의거 명확하게 유권자가 이해할 수 있는가?
공약의 적실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약 목표가 국가 현황에 적정하게 설정되어있는가</li> <li>- 공약이 해당 정책 환경과 얼마나 부합하는가</li> <li>- 권한에 부합하고 임기내 달성가능(실현가능)한 공약인가</li> </ul>
	정책공약이 시급성과 정책 환경에 부합하고 실현 가능한가?

- 위 3가지 평가지표별로 세부평가기준을 고려하여 5점 만점으로 평가위원들이 평가
  - \* 5점(매우 좋음), 4(좋음), 3(보통), 2(나쁨), 1(매우나쁨)
- 평가위원별 점수를 지표별로 평균 점수 산출, 이를 합쳐 평점화하여 A,B,C,D,F 5단계로 환산 (반올림 환산)
  - \* A, 5~4.5이상 / B 4.5이하~3.5이상 / C 3.5이하~2.5이상 / D 2.5이하~1.5이상 / F 1.5 이하~1

## 5. 평가점수

지 표	점수(5점 척도)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홍준표 (자유한국당)	안철수 (국민의당)	유승민 (바른정당)	심상정 (정의당)
가치성	3.50	2.42	3.50	2.30	3.80
구체성	3.10	2.42	3.33	2.20	3.40
적실성	2.80	2.50	2.92	2.20	2.90
<b>등급(평균)</b>	<b>3.13</b>	<b>2.45</b>	<b>3.25</b>	<b>2.23</b>	<b>3.37</b>

- ※ 청년 공약 심상정, 문재인, 안철수, 홍준표, 유승민 순.
- ※ 심상정 공약은 가치성, 구체성 모두 다른 후보보다 높음
- ※ 안철수, 문재인 공약은 가치성, 구체성이 비교적 높으나 적실성은 떨어짐
- ※ 홍준표, 유승민 후보는 가치성, 구체성, 적실성 모두 낮음



## 6. 총평

### [등록금]

- 공약이 없는 유승민후보를 제외하고 수준의 차이는 있으나 등록금 부담인하를 공약으로 제시함.
- 심상정후보는 등록금 인하를 위해 재정 지원 및 등록금 인하를 공약하고 있어 가장 개혁적이며, 문재인후보는 재정지원 대폭 확대를 약속함.
- 홍준표, 안철수, 심상정 후보가 약속한 학자금 대출 이자 인하 혹은 무이자 전환(홍,안)은 박근혜정부에서 추진한 정책으로 즉각 시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나, 상환기간 자율설정과 상환면책 등은 시행 상 논란이 예상됨.
- 문재인 후보는 연간 소요 재정 1.2조원을 재정지출 개혁과 세입확대를 통한 조달하고, 심상정 후보는 고등교육 재정 확보를 위해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을 공약하여 법적 근거를 제시했으나, 실현가능성은 낮음.

### [일자리]

- 전반적으로 청년일자리의 파격적 창출을 위한 스마트한 개혁 공약을 찾아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 특정 후보의 취업과정상의 공정성 확보 및 고용 안정성, 노동가치의 재정립 측면에서의 개혁 정도가 그나마 우리나라 고용 현실에서의 개혁의지가 엇보인 정도였을 뿐이라 사료됨
- 청년고용의무할당제, 청년고용보장제, 청년구직촉진수당 등과 같은 직접적인 지원보다는 고용이 늦어지더라도 청년들이 하고 싶은 일자리를 최선을 다해 노력할 때 얻게 되어지는 고용시장 풍토 마련이 더욱 시급하다고 생각됨
- Industry 4.0 시대의 변화 즉, 없어지거나 새로 생겨날 일자리 형태에 대한 고민과 시대적 요구에 걸맞는 일자리 창출 방안 및 전략에 대한 진지한 접근이 엇보이는 공약들이 개발되어 지길 바라는 바임
- 아울러 선심성 공약보다는 미취업 청년 한사람 한사람의 마음을 헤아리는 진정성 있는 공약이 청년들에게는 보다 절실하다는 것을 강조하고자 함
- 민주당(문재인 후보)와 정의당(심상정 후보)의 청년고용의무할당제 확대 적용하여 청년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공약은 매우 유사함(공공부문 현행 3% → 5%로 확대하고, 민간 기업 규모

에 따른 차등적용)

- 한국당(홍준표 후보)은 청년 일자리 대책으로 해외시장 개척을 제시하지만, 이전 정부가 추진한 정책으로 그 실효성이 의문시됨.
- 각 후보가 제시한 청년 일자리에서 큰 차이점은 문 후보와 심 후보는 ‘청년고용의무할당제’를 도입하는 것이고, 홍 후보, 안 후보, 유 후보는 이를 유보하고 있음.
- 청년 일자리에 대해서 안철수 후보를 비롯한 모든 후보의 공통된 공약은 청년구직(훈련)수당 지급을 약속하고 있는 것임. 하지만 청년수당은 구직이나 직업훈련을 연계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이른바 ‘기본소득’과는 차이가 있음
- 청년 일자리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고용정책이 필요하고,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심상정 후보가 제시하고 있음.

#### [주거]

- 5명의 후보 모두 청년층의 주거문제에 대해서는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다소의 차이는 있으나, 공공임대주택 확대 및 자금지원 등 적극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음
- 청년층의 주거문제와는 별도로 신혼부부 집 문제 해결을 위해 공약을 제시한 후보는 문재인 후보, 홍준표 후보, 안철수 후보임. 그러나 문후보의 공약이 구체적이며 정책의 완결성이 높다고 할 수 있음. 다만 땅값이 비싼 역세권내 민간소유 부지를 활용해서 임대주택을 공급하려는 데 초점을 두고 있어 민간특혜와 비싼 임대료 등의 문제가 우려됨.
- 심상정 후보는 대표적인 주거약자인 1인가구(1인, 청년, 대학생)에 초점을 맞추어 주거복지 차원의 공약을 제시한 것이 특징임
- 홍준표 후보는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지원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유승민 후보는 1~2인 가구 소형주택공급에 초점을 두고 있음
- 문재인후보, 안철수 후보, 심상정 후보 모두 대학교 기숙사 확대 및 기숙사형 임대주택 확대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구체적이지 않고 기존에 확대되고 있는 민자기숙사의 비싼 임대료 문제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지 않은 것은 아쉬움

## 7. 세부평가

### 1) 가치성(개혁성)

#### ①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 반값 등록금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등록금 인하 또는 장학금 등 지원을 위한 재정책확충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 정부의 재정지원을 확대하겠다는 주장은 가치성 높음.
- 청년고용의무할당제 적용, 청년구직촉진수당 도입 등을 통해 고용확대 및 구직자 생활지원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려는 정책방향은 바람직함. 신생기업의 열기가 가득찬 창업국가 조성 또한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또 다른 해법이라 판단됨
- 현재 심각한 청년 일자리 대책으로 2020년까지 향후 3년간 한시적으로 청년고용의무할당제 적용은 고려할 수 있는 방안임. 청년구직촉진수당 도입. 청년주거대책 등 공공임대 확대 공 급 개혁적인 정책을 제시하고 있음.
- 청년층 맞춤형 주택 30만실을 공급하는 등 미래세대의 주역인 청년층(2030세대)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적극적인 방안을 제시하고 있고, 신혼부부 집 문제 해결을 위해 신규 공공임대주택의 30%인 20만호(연간 4만호)를 우선 배정하는 등 우리사회 현안인 저출산 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해소방안을 제시하고 있음. 그러나 공공보유 토지를 활용하는 것이 아닌 대도시 역세권내 민간주택을 활용하여 공급하겠다는 발상은 땅값상승과 고가월세 부담의 문제를 안고 있음. 문재인 후보가 모델로 삼고 있는 서울형 청년주택은 역세권내 민간주택 소유자들에게 용도변경, 용적률 완화 등의 특혜를 제공하되 임대주택을 확보하고, 임대료를 제한하겠다는 것임. 하지만 임대주택 확보가 용도변경 등의 특혜에 따른 땅값상승에 비해 매우 미흡하여 민간소유자들의 개발이익 사유화가 우려되고, 기존 역세권이라는 비싼 땅값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시세이하의 임대료를 책정한다해도 청년들이 지불하기에는 여전히 비쌌
- 대학 기숙사 수용인원 5만명 확대는 구체적 방안이 제시되지 않았음. 다만 최근에 확대되고 있는 민자기숙사는 1인실 기준 월임대료가 50만원 이상으로 너무 비싸다는 문제가 지적되어 온 만큼 이 부분에 대한 대안이 함께 제시되지 않는다면 실질적인 청년주거안정으로 이어지기에는 어려움

#### ② 홍준표 (자유한국당)

- 학자금 대출 시 이자부담을 낮추는 대책은 체감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높은 등록금 부담을 낮

출 수 있는 대책이 제시되지 못함. 성적 우수자 입학등록금 지원, 졸업유예비 지원도 단편적이며 매우 지협적이어서 개혁성 낮음.

- 청년 일자리 뉴딜정책으로 110만개 일자리 창출이라는 슬로건은 그럴듯하나 기술경쟁력을 갖춘 글로벌 혁신형 강소기업 육성과 기술창업 및 서비스창업 활성화 달성이라는 또 다른 선행과제가 산재되어 있어 개혁 추진의 어려움이 예상됨
- 해외시장 개척을 통한 일자리 창출이나 해외 건설을 통한 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 연해주 산업공단 개발 등은 고도화사회로 진행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현실과는 동떨어진 정책이라 사료됨
- 글로벌 청년인재 양성 차원에서의 청년해외취업 및 초기 정착 지원 확대 등의 해외지향적 취업정책은 바람직하나 지원규모 및 수준은 미약하다고 판단됨. 해외시장 개척을 통한 일자리 창출은 이명박 박근혜정부의 정책의 재탕으로 큰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없음.
- 청년 문화인 육성 및 일자리 창출도 기존의 정책과 차별성이 없음. 한국형 실업부조제 도입으로 적극적인 노동시장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구직수당 지급. 기존의 정부 정책과 차이가 없음.
- 청년과 신혼부부 100만 세대를 선정하여 공공분양, 우선입주, 주택수당 지급, 자금융자 등을 추진하는 등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주거지원방안을 제시하고 있으나, 문재인 후보에 비해 보다 적극적인 문제해결의 의지가 상대적으로 약해 보임. 공공임대주택을 시세보다 30% 저렴하게 공급하고, 2030 세대의 내집마련을 위해 시세보다 10% 저렴한 공공분양주택을 공급하는 것도 필요한 정책으로 보임. 다만 지금의 집값이 30% 이상 거품임을 감안하고, 공공이 논밭임야 등을 강제수용해서 분양주택을 공급하는 만큼 10% 저렴한 주택은 사실상 적절한 분양가로 보기는 어려움.

### ③ 안철수 (국민의당)

- 기존의 대출과 장학금 지원방식을 답습하고 있어 개혁적이라 보기 어려움. 입학금 폐지는 기존 제도의 문제점을 일부 개선하는 정도임. 다만 학자금 대출 제도와 국가장학금 제도를 함께 개선하겠다고 하는 것과 저소득층 등록금과 생활비 무상지원을 시행하겠다는 것은 의미 있는 공약임.
- 5년간 한시적인 청년고용보장과 미취업 청년 훈련수당 지원 정도의 공약이므로 공약 자체는 바람직하나 추가적인 정책이 부재하고 있어 전체적인 정책 미비가 아쉬움. 직접적인 청년일자리 창출보다는 교육개혁 및 미래준비를 위한 생태계 구축으로 간접적이나 근본적인 일자리 창출 정책을 추진하려고 한 점에서는 고무적임

- 5년간 한시적인 청년고용보장(Youth Guarantee) 집중 추진
  - 중소기업 초임(2500만원)이 대기업 초임연봉(4000만원)의 80% 수준까지 이르도록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 1인당 월 50만원씩 2년간 지원
- 미취업 청년 훈련수당 지원
  - 미취업 청년이 취업 역량 강화를 위한 학습(자격증 취득, 직업훈련, 체험프로그램 등)에 참여할 경우 1인당 월 30만원씩 6개월간 지원
- 청년 일자리에 대한 임금보전과 미취업 청년에게 훈련수당 지급은 가치가 있음.
- 청년희망주택을 임기동안 25만호(연간 5만호)를 공급하여 청년빈곤층에 우선 배정하는 등 주거취약계층에 놓여 있는 청년층(2030세대)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적극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있음. 신혼부부에게는 공공임대주택 입주조건을 완화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으나, 우리사회 현안인 저출산 문제에 대한 별도의 적극적인 해소방안을 제시하지는 않고 있음
- 기숙사형 임대주택 확대는 구체적 방안이 제시되지 않았음. 다만 최근에 확대되고 있는 민자 기숙사는 1인실 기준 월임대료가 50만원 이상으로 너무 비싸다는 문제가 지적되어 온 만큼 이 부분에 대한 대안이 함께 제시되지 않는다면 실질적인 청년주거안정으로 이어지기에는 어려움

#### ④ 유승민 (바른정당)

- 공약 없음
- 청년 일자리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정책 공약이 눈에 띄지 않고 있으며, 민간기업 육아휴직 3년 보장, 국민연금 최저연금액 단계적인상 등을 위해 '중부담-중복지'정책 실현을 위해 조세부담을 제고 정도가 고용관련 공약인 것으로 판단됨
- 청년실업부조 및 특별실업부조 제도 도입
- 고용보험을 관대하게 적용하여 실업수당을 인상하고 지급기간을 연장하는 방식으로 청년실업부조 제도를 도입하겠다는 정도가 청년일자리와 연계된 공약이라 판단됨
- 청년층의 주거문제 집문제 해결을 위해 소형주택(1~2인 가구)을 공급하겠다는 것은 2030세대의 욕구를 어느정도 담아내고 있는 공약이라고 판단됨. 그러나 공급주체, 연간목표, 공급가격 등에 대해 불분명함. 기존 빈집 및 노후주택 재건축 후 대형주택을 소형주택으로 분할 등 민

간주도의 공급을 제시하고 있으나 공공주도 없이 청년임대15만호 공급이 가능할 지는 회의적. 또한 민간주택을 활용하여 공급하겠다는 임대주택도 시세의 80%라 하지만 기존 집값이 높기 때문에 저소득 청년들에게는 여전히 비쌀 수 있음. 공약자료집에 포함된 저소득 1인 청년가구를 주거취약계층에 포함하고, 소액임대보증금 무이자 용자 미 대출보증을 하는 것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다만 공약자료집이 늦게 나왔고, 공약평가 기준이 되는 선관위 10대 공약에는 빠져있음

#### ⑤ 심상정 (정의당)

- 국공립대 등록금 제로, 사립대 액수 상하나 표준등록금제로 등록금 반값, 입학금 폐지 공약은 반값 등록금을 위한 개혁적 대책으로 평가됨. 이를 위해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을 제안함.
- 공약의 대부분이 채용시 차별없는 형평성 유지 및 취업(채용) 후 고용노동자에 대한 처우개선 또는 고용안정성 측면에 치우쳐 있다고 판단됨. 청년실업 해결을 위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적 고민은 상대적으로 약하다고 판단됨
- 수습기간 중 최저임금의 90%만 적용하도록 한 「최저임금법」 개정으로 수습기간 노동자에게도 최저임금 100% 보장하고 인턴제 폐지
-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 및 300명 이상의 민간기업 역시 5% 이상 청년의무고용 할당제 적용
-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노동자의 고용보험 가입 허용
- 청년실업부조 도입은 개혁적임.
- 저소득층 무주택세입자로서 주거복지 사각지대로 남아있는 1인가구를 위한 맞춤형 주거지원정책을 제시하고 있음. 1인가구 맞춤형 소형임대주택과 사회주택 공급 확대, 서울형 장기안심주택 국가사업화, 1인가구 금융지원, 대학생 주거수당 지급, 기숙사 수용률 30% 이상 의무화 등 다양한 형태의 주거불안 해소방안을 제시하고 있음. 그와는 별도로 신혼부부 집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은 제시하고 있지 않음
- 기숙사 수용률 30% 이상 의무화로 기숙사 확충은 구체적 방안이 제시되지 않았음. 다만 최근에 확대되고 있는 민자기숙사는 1인실 기준 월임대료가 50만원 이상으로 너무 비싸다는 문제가 지적되어 온 만큼 이 부분에 대한 대안이 함께 제시되지 않는다면 실질적인 청년주거안정으로 이어지기에는 어려움

## 2) 구체성

### ①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 대학등록금 획기적 인하를 위해 매년 1.2조원의 재정이 소요된다는 내용 이외에 구체적인 내용이 없음. 등록금부담을 어떻게 절반으로 낮출지 구체적인 계획이 없음. 현재처럼 국가장학금을 확대하여 낮출지 등록금 인하와 국가장학금과 교내장학금을 확충하여 낮출 것인지 등 세부계획은 제시되지 않음. 소요 재정 산출에 대한 근거 등은 제시하지 않아 적합성을 판단하는데 한계가 있음. 반값등록금 재정이 연평균 1.2조원 소요된다고 했는데, 근거가 부족함. 현재 대학등록금 14조원 중 국가장학금(약 4조원), 교내장학금(약 2.2조원), 교외장학금(약 1조원)을 지원하고 있음.
- 정책방향이 바람직함에도 불구하고 고용목표가 공공부문 중심으로 81만개 창출이라는 것은 현실을 감안하지 못한 이상적인 수치라 사료됨. 청년일자리 창출계획 자체에 비해 재정지출 개혁과 세입확대 계획이 구체적이지 못한 점이 한계점으로 판단됨
- 「알바존중법」도입해 “30분 배달제”와 같은 부당한 업무지시 제한 근거 마련은 무엇으로 위한 법제정인지 불명확함.
- 청년고용할당제·구직촉진수당에 대한 재원 구상이 구체적이지만, 청년주거대책에 대해서는 불명확함.
- 근로감독관을 확대하고 최저임금 전담감독관 설치해 청년 체불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정책은 특별히 청년 일자리와 관계있다고 할 수 없음.
- 청년층과 신혼부부의 주거문제 해결을 위해 수요와 비용을 고려하여 체계적이고 완결적인 형태로 제시되고 있음. 공약 목표가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으나, 재원조달의 어려움이 예상되고, 신혼부부 주거안정 지원금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성하겠다는 것인지 불명확함

### ② 홍준표 (자유한국당)

- 대학등록금 문제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없으며, 일반상환학자금대출을 저금리로 전환하고, 취업후 상환학자금 대출제도를 무이자로 전환한다는 내용이 전부임. 무이자 대출전환의 경우 세부방안이 제시되어야 하나 이에 대한 언급 없음.
- 대부분의 실행방안들이 촉진, 확대, 추진 등 추상적인 용어들로 슬로건화 되어 있어 구체적

으로 어떻게 실현할 것인지가 모호하다고 판단됨

- 청년정책의 효율성 및 정책수요자의 체감도 제고를 위해 청년문제 전담부서 신설(여성가족부 -> 여성가족청년부)
- 청년들의 중소기업 정규직 채용 후 2년간 최저임금의 150%수준을 미달한 경우 미달액에 대해 정부와 기업이 각각 50%부담
- 청년 전담부서의 신설과 임금 보전방안 등은 구체적임
- 청년층과 신혼부부의 주거문제 해결을 위해 지원유형을 제시하고 있으나 주거유형이나 조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제시되지 않고 있음. 공약 목표가 제시되어 있으나, 재원조달방안이 제시되지 않고 있음

### ③ 안철수 (국민의당)

-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고 있으나, 국가책임장학금제도의 경우 국가장학금 지원범위를 어디까지 확대하겠다는 것인지 소요예산이 얼마인지 등 구체적 계획을 밝히지 않음. 대학재정운용의 투명성 강화가 어떻게 등록금 부담 인하로 이어지는지에 대한 설명 부족. 등록금 심의위원회의가 등록금 인하를 위해 어떤 역할을 한다는 것인지도 불명확함
- 청년고용보장과 관련하여 중소기업 취업 청년에게 1인당 월 50만원씩 2년간 지원하는 정책이라든지 취업역량강화 학습 참여시 1인당 월 30만원씩 6개월간 지원한다는 정책 등은 구체적인 측면이 있다고 판단됨.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원마련 정책의 경우 기존 일자리 예산에서 조정하거나 고용보험법 등의 관련법 개정으로 충당한다는 내용은 다소 소극적인 전략으로 평가됨
- 기존 일자리 예산에서 조정해 재원 마련하고 고용보험법 등 관련 법률 개정을 통해 이행하는 방안은 구체적임.
- 청년층의 주거문제 해결을 위해 다양한 유형의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지원방안을 제시하는 등 매우 구체적인 형태로 제시되고 있음. 공약 목표와 실천계획이 제시되어 있으나, 문제인후보와 마찬가지로 재원조달의 어려움이 예상됨

### ④ 유승민 (바른정당)

- 공약없음



- 청년일자리 관련 정책공약이 미약하다보니 구체성을 논할 여지가 없다고 판단됨
- 관대한 고용보험 : 실업수당 인상 및 지급기간 연장
- 청년층 소형주택(1~2인 가구) 공급과 관련하여 목표가 제시되어 있으나 어떻게 15만호를 확보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불분명함. 기존 빈집 및 노후주택 재건축 후 대형주택을 소형주택으로 분할, 토지임대부 개발, 임대 등의 방식으로 청년공간을 확보하겠다고 하나 15만호 모두를 기존 빈집 및 노후주택 재건축을 통해 공급하겠다는 것인지는 불분명

### ⑤ 심상정 (정의당)

- 현행 대학 등록금 현황에 근거해 구체적인 등록금 인하 목표액을 제시했으며, 학자금 대출 상황에 대한 부담 완화 대상과 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했으나, 국공립 대학등록금을 어떻게 제로화할 것인지, 사립대학 액수상한 표준등록금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 구체적인 내용이 없음. 국공립대학 등록금을 제로화하기 위해 필요한 재원부담은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내용 없으며,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이 제시되어 있지만, 구체적인 내용이 없음
- 앞서 밝힌 바와 같이 노동자의 불평등해소와 고용안정성,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들은 구체적인 방안들을 피력하고 있으나 청년 일자리 관련 정책들은 노동시간 단축으로 50만개 일자리 창출,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4차 산업 일자리 창출 등 추상적이고 일반적인 정책내용만을 담고 있음
- 구체적인 법개정 등을 제시하고 있음. 소요 예산에 대해서는 구체적이지 못함.
- 우리 사회에서 대표적인 주거약자인 1인가구의 주거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은 매우 구체적으로 완결적인 형태로 제시되고 있음. 또한 공약 목표가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으나, 재원 조달의 어려움이 예상됨

### 3) 적실성(실현가능성)

#### ①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 매년 1.2조원을 투입하겠다는 계획이나 이에 대한 재정마련 계획이나 증세 대책은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아 실현가능성은 낮음.
-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만 하더라도 5년간 21조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어야 하는데 이 자체도 예산부담이 될뿐더러 이들의 정년까지의 임금까지 고려할 경우 이후의 예산부담

은 더욱 가중될 것으로 예상됨

- 청년고용할당제는 기업에 채용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그 취지가 제대로 반영되는 청년 채용이 가능할지 의문임.
- 신혼부부 집문제 해결에 적극적인 정책방안을 제시한 점이나 청년층의 수요가 큰 대도시 역세권에 저렴한 가격에 중점적으로 공급하는 방안이 2030세대의 욕구를 적절히 담아내고 있는 등 적실성이 큰 공약이라고 판단됨. 다만, 대도시 역세권에 시세 이하의 청년주택을 20만 실을 확보하는 것은 지금까지 경험상 쉽지 않은 일이라 판단되며, 비싼 임대료 때문에 실질적인 청년 주거안정에 기여하지 못한 채 민간소유자들의 개발이익 증대수단으로만 악용될 우려가 매우 높고, 개발이익의 극대화를 원하는 민간소유자들과의 이해관계 충돌로 사업추진도 원활치 않을 것으로 보임
- 기숙사 수용인원 5만명 확대는 구체적 방안이 제시되지 않았고, 서울의 경우 현실적으로 부지 확보가 쉽지 않고 지역주민의 반대로 실현가능성이 적음

## ② 홍준표 (자유한국당)

- 취업후 상환학자금 대출제도를 무이자로 전환할 경우, 국가장학금 문제와 적절하게 연계되어야 현실성이 높아진다. 국가장학금을 현재와 같이 그대로 둔 상태에서 취업후 상환학자금 대출을 무이자로 전환할 경우 정부재정의 급격한 부담 증가로 실현가능성 또는 현실성이 떨어짐
- 규제 대폭 완화로 민간 부문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고 공공부문 구조조정으로 청년 일자리 사업에 최우선적으로 예산을 배정하는 방식으로 자원조달방안으로 수립하고 있어 전략이 평이하고 소극적이라 판단됨
- 해외시장 개척으로 청년 일자리를 확대한다는 계획은 수립할 수 있지만, 이전 정부에서 성과가 미흡한 점을 고려하면 현실적합성이 부족함.
- 청년 전담부서를 신설한다고 청년 일자리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는 생각되지 않음.
- 중소기업에서 청년 임금에 대한 임금보전 방안은 실현될 수 있을 것임.
-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년평균 12만호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등 무주택서민층의 욕구를 적절히 담아내고 있으나, 청년층과 신혼부부의 주거안정 욕구를 충분히 담아내지 못한 것으로 판단됨. 박근혜 정부에서 추진된 청년 및 신혼부부를 위한 행복주택 정책과 크게 다르지

않은 만큼 정부 의지만 있으면 바로 시행가능한 정책으로 보임. 그러나 20만 공급을 약속했던 행복주택 사업이 지역주민 및 지자체 반발 등에 의해 입주실적이 40가구에 그치는 현실을 감안하여 정부의지가 매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 추진방안이 제시되지 않음

### ③ 안철수 (국민의당)

- 등록금 무상 및 반값, 고교 무상교육, 학교환경개선 등을 포함하여 교육 공약에 추가 소요 예산을 8.2조로 예상하고 조세개혁과 사회보험 인상, 재정개혁 등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겠다고 제시하고 있으나 실현가능성은 낮음. 대학 재정운용 감시에 대한 대학의 반발이 예상되어 실현가능성이 불투명함
- 비교적 안정적이고 현실적인 청년 일자리 정책을 표방하고 있다고 판단되나 일반적인 정책만을 내걸고 있다는 느낌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됨. 재원 마련을 위한 정책들도 소극적인 견해를 피력하고 있어 목표 실현을 위해 더 많은 재원이 필요할 경우 이를 대비할 위기대응 차원에서의 구체적인 전략 마련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 국민의당(안철수 후보)의 공약은 적극적인 일자리 창출이 아닌 취업에 성공한 청년에 대한 임금보전과 수당지급으로 한계가 있음
- 청년희망주택의 대량 공급과 2030세대 가운데서도 빈곤층 우선의 공급과 주거비 지원방안에 초점을 두고 있있는 등 저렴한 임대주택을 원하고 있는 청년빈곤층의 욕구를 적절히 담아내고 있는 등 적실성이 큰 공약이라고 판단됨. 다만, 저출산의 요인 가운데 주거가 중요한 요소인 점을 고려한다면, 신혼부부의 주거안정 요구가 반영되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음.
- 기숙사형 임대주택 공급은 구체적 방안이 제시되지 않았고, 서울의 경우 현실적으로 부지확보가 쉽지 않고 지역주민의 반대로 실현가능성이 적음

### ④ 유승민 (바른정당)

- 등록금 공약없음
- 재원마련을 위해 조세부담을 제고 등의 직접적인 정책을 내놓고 있는 등 제도 개선 정도의 일반적인 재원조달방법으로 일관하고 있어 위기에 대응하는 실현가능한 정책은 전무하다고 판단됨
- 청년 일자리 정책으로 고용보험법의 개정만을 제시하는 것은 미흡함.

- 청년층의 주거문제 집문제 해결을 위해 소형주택(1~2인 가구) 공급하겠다는 것은 2030세대의 욕구를 어느정도 담아내고 있는 공약이라고 판단 됨. 박근혜 정부에서 이미 빈집 살리기 특별법안이 통과된 만큼 새정부에서도 추진가능한 상황. 그러나 기존 집값이 너무 높은 상황에서 공공주도가 아닌 민간의 빈집이나 노후주택을 활용하겠다는 것은 문재인 후보처럼 민간의 영리추구 수단으로 악용되고,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완화에도 크게 기여하기 어려울 수 있음.

#### ⑤ 심상정 (정의당)

- 국립대 등록금 무상 및 사립대 등록금 반값으로 낮추기 위해서는 대학의 반발과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나 재정마련 방안이나 반발을 극복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지 못해 실현가능성은 낮음.
- 노동자 불평등해소 및 고용안정성, 노동환경 개선 등의 개혁적인 정책들은 점차 제도적으로 개선되어 나아가야 할 것으로 사료되나 청년일자리와 관련해서는 다른 후보들과 마찬가지로 재원조달방법이 구체적이지 못하고 새로운 방식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됨
- 차별 없는 채용과정의 법제화 등은 충분히 실현가능성이 있음.
- 1인가구의 주거문제 해결에 적극적인 정책방안을 제시한 점은 2030세대의 욕구를 적절히 담아내고 있으나, 저출산문제 해소를 위한 신혼부부 주거안정 욕구는 다루지 않고 있음. 대학생 기숙사 수용률 30% 이상 의무화방안은 서울의 경우 현실적으로 부지확보가 쉽지 않고 지역주민의 반대로 실현가능성이 적음